

대기업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급증 법적 규제 밖 실질경영 우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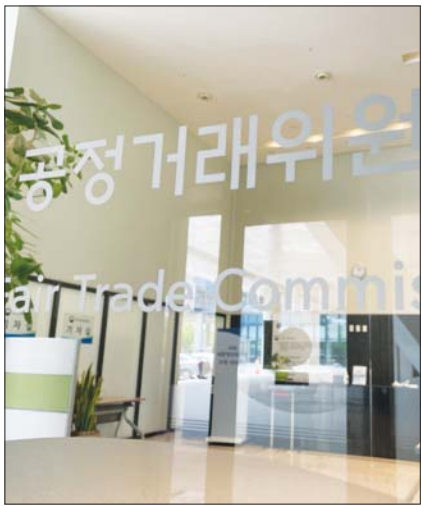
공정위, 공시집단 지배구조 공개
사익편취 대상社 미등기임원 다수
이사·미등기 직원 겸직 관행 여전
이사회 감시·견제 기능 작동 미흡
안전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 지속
소수주주 보호제도 실효성 낮아

대기업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규율 밖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책임경영의 사각 지대가 넓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총수일가의 경영 참여 확대와 미등기임원 증가가 뚜렷하다. 공시집단 지배구조 현황은 공정위가 소유지배구조와 경영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분석해 공개한다. 올해 분석대상은 2025년 공시집단 92곳 중 신규 지정 집단 등을 제외한 86개 공시집단 소속 2994개사다.

우선 총수 있는 77개 집단 미등기임원 비율은 전년 5.9%에서 7.0%로 증가했고, 상장사의 경우 같은 기간 23.1%에서 29.4%로 급증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미등기임원 비중도 54.4%로 절반을 넘는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재직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58.3%(12개사 중 7개사)로 가장 높았고,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순으로 높았다.

미등기임원은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도 회장·사장·전무 등 직함을 통해 업무 집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 임원이다. 읍잔디 공정위 기업 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임원은 경영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의 과반수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총수일가가 감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는지 면밀히 감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수일가의 이사 겸직도 문제다. 77개 집단에서 총수일가 1인당 평균 2.2개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데,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 직함을 보유한다. 특히 1인당 평균 1.6개 미등기임원 직위를 겸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겸직 수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 (7.3개), '한화'·'태광' (각 4개), '유진' (3.8개), '한진'·'효성'·'KG' (각 3.5개) 순이다.

음 과장은 "총수일가는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을 많이 맡고 있다"며 "한 사람이 여러 회사에서 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업무 집중 곤란,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22일 개정돼 시행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으나, 미등기임원인 총수일가가 증가하면서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나온다.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 수준으로 법정기준(44.2%)보다 높고, 법상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나, 여전히 감시와 견제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회에 상정된 안전의 99% 이상이 원안 가결되고 있고,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전 비율은 최근 5년 중 최저치(0.38%)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음 과장은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도 총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총수 있는 집단은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ESG위원회 설치 비율이 높았으나, 반대로 견제 기능이 강한 보상위원회·감사위원회 설치 비율은 낮았다.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등은 88.4%의 상장사가 도입했고, 소수주주권 행사 건수도 93건으로 사상 최대였다. 그러나 소수주주의 경영감시 기능을 위한 핵심 제도인 집중투표제는 상장사의 96.4%가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었고, 실제 실시 건수는 3년 연속 1건에 그쳤다. 전자투표제 도입률은 높았지만 소수주주의 실제 전자투표 행사율은 1%대에 그쳤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송미령 “영농형 태양광, 농촌미래 핵심과제”

농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을 전국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19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초청해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를 가졌다.

농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시설의 부작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난개발 방지 ▲식량안보 ▲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하에 과거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향후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소개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성공적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농식품

부는 앞으로 국회, 농업계, 전문가 등 현장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도입 관련한 농식품부의 추진 방향이 상세히 공유됐다. 아울러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됐던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발전사업 주체를 비롯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립한 다양한 시각 및 입장을 (가칭) '영농형 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지속가능 에너지 생태계·지역 상생 강화”

한전, 'BIXPO' 성황리 폐막

한국전력이 지난 11월 5~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가 국내외 총 2만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폐막했다. 166개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여한 가운데, 5360만달러 수출 성과도 달성했다.

개최 10년을 맞은 올해 행사는 '에너지로 연결하다(Connect Everything with Energy)'를 주제로 신기술 전시회, 글로벌 컨퍼런스, TEDx KEPCO 등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기술·산업의 흐름을 공유하고 차세대 전력산업 비전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신기술 전시회에는 국내외 166개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한전관'에서는 I-DPP, SEDA, ADMS 등 주요 전력신기술을 T-OLED 방식으로 선보였고, '지역특화산업관'은 지역 기반 산업·인

재 생태계를 소개하며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글로벌 리더관'에는 스토어닷, 리벨리온 등 유니콘 기업과 CES 2026 혁신상 수상 기업이 참여해 관람객 관심을 끌었다.

국제컨퍼런스는 총 41개 세션이 열렸다. 특히 'Powering AI, Energizing the Sustainable Future'를 주제로 한 Energy Leaders Summit에서는 S&P 글로벌, AWS, EPRI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AI 기술의 산업 적용과 전력망 운영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 KEPCO R&D 컨퍼런스에서는 DC 그리드, 차세대 전력망, AI 융합 기술 등 한전의 연구개발 방향을 공유했다.

수출상담회에서는 해외 바이어 7개국 17개사와 국내 34개 기업이 참여해 총 11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그 결과 수출계약·MOU 13건을 포함해 총 5360만달러 규모의 실적을 거뒀다.

/세종=한용수 기자

‘K-스마트농업 기술’ 인니 정부에 전수

농식품부·농정원

청년농업인 소득향상 사업 이양식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스마트농업 협력사업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이양했다고 밝혔다.

19일 농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농업부 청사에서 '인도네시아 K-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말레니얼 농업인 소득개선사업' 완료 보고 및 이양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정부 요청에 따라 2021년부터 올해까지 농식품부가 실시해 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말랑·보고르 지역에 K-스마트팜을 구축하고 청년농업인에게 한국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양식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또 구축된 스마트팜 시설·운영 시스템을 인도네시아 측에 공식적으로 이양했다.

농식품부와 농정원은 현지 기후에 맞춰 토마토, 파프리카, 멜론 등 고부가가치 품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농업부 청사에서 한·인니 간 'K-스마트팜 기술 이양식'이 열리고 있다. /농정원

스마트팜 모델을 제시했다.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한 브랜드 'INAKOR FARM'을 통해 수라바야 지역 Hokky 마트 4개 지점에서 멜론·토마토·파프리카를 판매하며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K-스마트팜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저온저장·포장 개선·품질유지관리 체계로 농산물 신선도가 크게 향상됐다. 생산·판매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도 마련했다.

사업 기간 500여 명의 인도네시아 청

년농업인이 스마트농업 교육을 받았고, 일부는 연수 후 자체적으로 온실 개보수나 수경재배시설을 도입해 5배에 달하는 농업용수 절감 효과를 거뒀다.

알리 자밀 인도네시아 농업부 사무총장은 "이번 협력은 인도네시아 농업 인적 자원 교육 강화와 농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큰 혜택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안재록 농정원 부원장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해 스마트농업 기반의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와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업용 비서 'AI 이삭이' 고도화 착수

농진청, 해충·출하시기까지 통합 제공

농촌진흥청이 농업용 인공지능(AI) 비서인 'AI 이삭이'를 고도화한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 5년 내 농가수입을 평균 20% 끌어올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농진청이 축적해온 고품질 데이터를 AI 이삭이에게 학습시킨다. 연간 농사계획, 기상재해 정보, 해충 이동경로 예측, 출하시기 등 농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획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과학기술 AI 융합 전략'을 발표했다. 농업의 AI 적용을 가속화해 기후위기와 고령화, 농촌 소멸 등 농산업 구조의 혁

신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농진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농가 수입 20% 향상 ▲농작업 위험 20% 경감 ▲기술 개발·보급 기간 30% 단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전략은 AI 융합을 통한 현안 해결, 데이터·인프라·인재를 잇는 AI 생태계 조성, AI 기반 연구·보급·조직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우선 농업 분야에서 진단 및 예측을 기반으로 한 AI 농업비서 AI 이삭이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AI 이삭이를 '올타임 농업기술정보 서비스'로 확대해 1년 농사 계획부터 일일 작업 결정까지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